

불교계 '매관매직설' 뜯소문 아닌 사실로

“주지·종회의원등 대가 거액상납 관례화”

선봉스님 양심선언 파장

전 동화사 재무국장 선봉 스님의 양심선언은 그동안 무성하게 떠돌던 불교계의 매관매직설이 결코 뜯소문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선봉 스님은 지난 4일 양심선언에서 “서 원장이 주지 임명, 사찰내 각종 공사, 종회의원 선출 등 갖은 명목으로 한번에 수백만~수천만원씩 금품을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며 “이런 매관매직은 서 원장 취임 뒤 관례화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나도 86년 10월 경북 청송군 대전사 주지로 임명될 당시 현금 5백만원을 서 원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92년 7월 10대 종회의원으로 선임됐을 때도 3천만원을 서 원장의 측근을 통해 건네주었다”고 밝히고 “87년 종단 불사기금 명목으로 5백만원과 남농 현관(시가 2백만원) 등 서화 2점을 상납하는 등 해마다 8백만~1천만원씩을 상납해왔다”고 덧붙였다.

불교계에서는 선봉 스님의 이러한 폭로에 대해 서 원장 취임 이후 불교계의 병폐가 된 매관매직 실태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

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무원 사정에 정통한 한 스님은 서 원장의 비자금에 크게 주지 임용과정에서 받는 돈과 이른바 ‘이권사찰’ 수입의 상당부분을 상납받는 돈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서 원장이 푼돈이라도 직접 챙기는 성격이라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조성되는 비자금이 한해 2백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스님에 따르면 주지 임용과정에서 받는 돈은 거의 모든 절에서 기본이며 서울의 0사, 8사와 설악산 8사 등 부유층 신도가 많거나 관광수입이 짙은 절에서는 수억원대의 돈이 오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국립공원이거나 관광지 등에 위치해 대표소를 끼고 있는 절은 대부분 서 원장 직속 심복을 주지로 임명해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수입을 그대로 상납받는다는 것이다.

이 스님은 “아들을 낳거나 합

격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0사의 경우 한해 수입이 50억원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총무원으로 직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불교 관계자도 “서 원장은 상납을 거부할 경우 주지직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줘 암묵적으로 상납을 강요해왔다”며 “그동안 봉은사, 보문사, 신흥사, 흥국사 등에서 있었던 폭력사태는 서 원장의 측근을 주지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 주지는 자신이 몸담은 절에서 임명되지만 서 원장이 심복을 심은 곳은 전혀 무관한데도 임명되기도 한다”면서 “규정부 출신의 8스님은 전남 8사 승려였으나 충남 8사의 말사인 8사 주지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매관매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불거져나와 지난해 5월 동국대 총학생회는 “설악산 신흥사 주지 해법 스님이 90년 6월

자신의 재임명을 요청하며 서 원장에게 3억원을 줬다”며 국민은행 반포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2백장의 수표번호까지 증거물로 확보해 폭로한 바 있다. 당시 해법 스님은 실제 종헌·종법상 주지 임기가 4년인데도 2년 임기로 임명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또 지난해 3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연합정화위원회’는 서 원장이 △서울 8사 주지를 임명하면서 6억원 △공주 8사 주지 임명 때는 5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청와대 등에 내기도 했다.

법종추족 승려들은 서 원장이 비자금의 일부를 권력층에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의 축재에 써왔으며, 그동안 당국에 서 원장의 이러한 비리를 여러 차례 진정했으나 서 원장과 유착한 권력이 이를 비호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종추의 한 관계자는 “동국대 학생회가 폭로한 수표번호를 추적할 경우 매관매직의 진위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박종언 권태호 기자